

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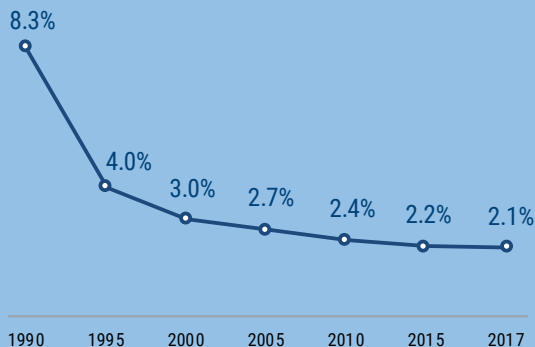
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

“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를 통한 남북 통일의 경제·사회적 부담 최소화 및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북한지역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. 남한의 과거 인프라 투자 실적을 고려하여 2050년 북한 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9개 분야 투자 규모를 산정한 결과 약 324조 원으로 추계되었다. 동 금액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분담하여 차관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고(30년간), 이후 남북 자본통합(2051년)을 실시하는 경우 2060년 북한 1인당 GDP는 남한의 약 54%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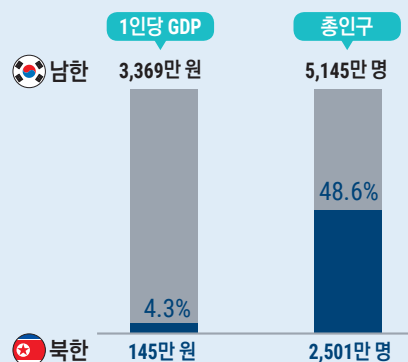
※ 본 연구는 NABO의 2014년 및 2015년의 북한 경제(통일) 연구를 심화·발전시킨 것임.

북한의 GDP는 1990년 남한의 8.3% 수준에서 2017년에는 2.1% 수준으로 하락
201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 대비 4.3% 수준이나 인구는 48.6% 수준

연도별 남한 대비 북한 GDP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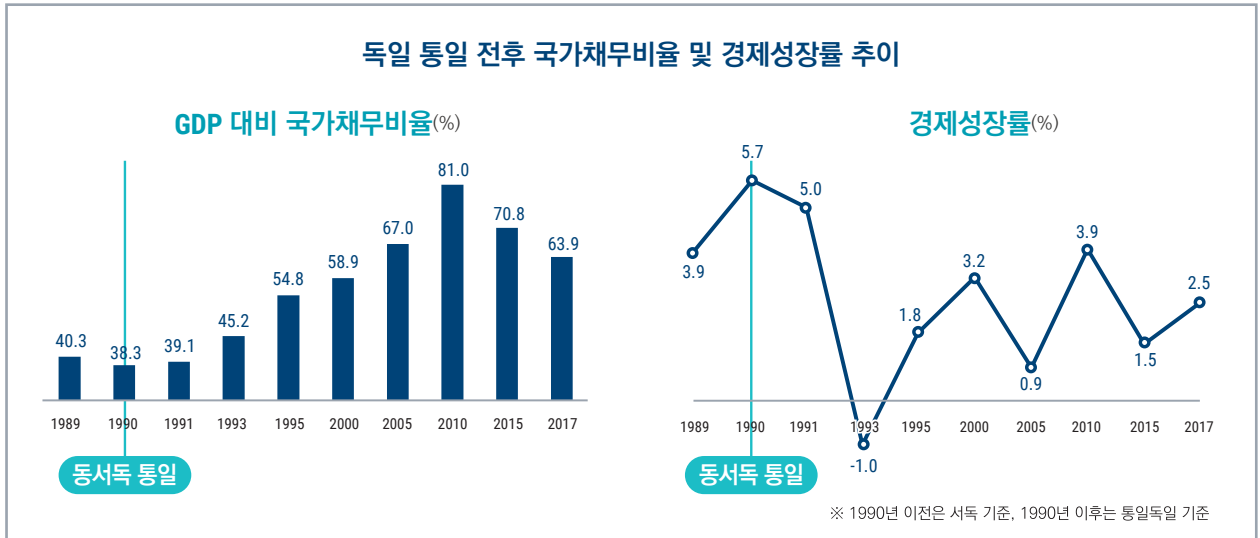


2017년 남북한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



I. 독일 통일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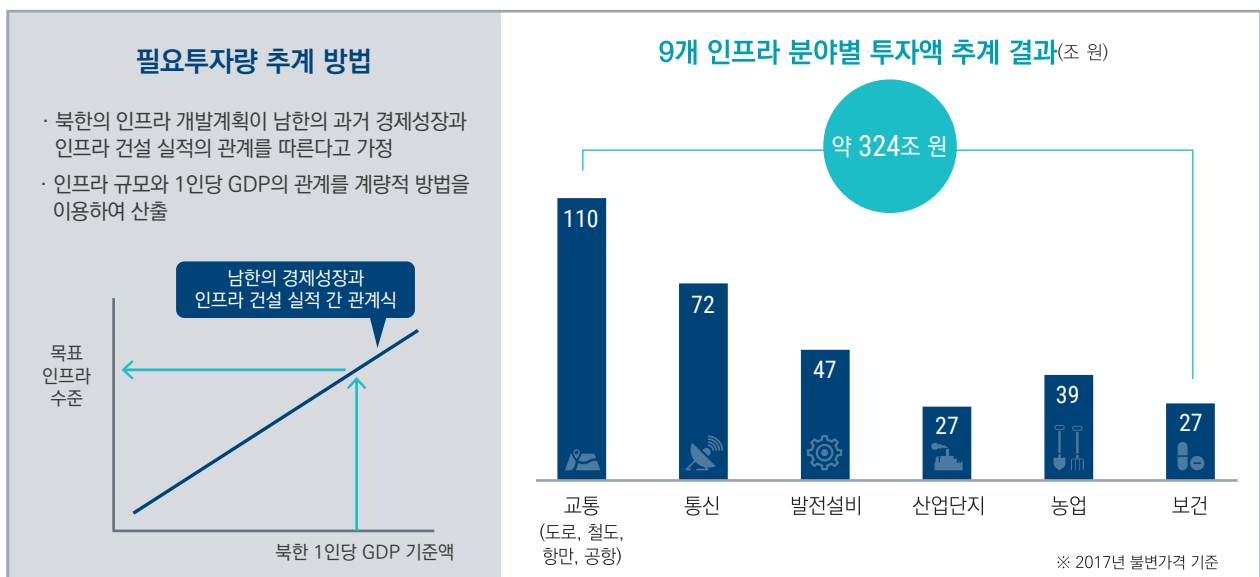
- 동서독간 소득격차가 큰 상황에서 통일 이후 동독지역으로의 이전지출 증가(통일 후 20년간 매년 서독 GDP의 약 4~5%)로 통일 독일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고, 경제성장이 둔화



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통일은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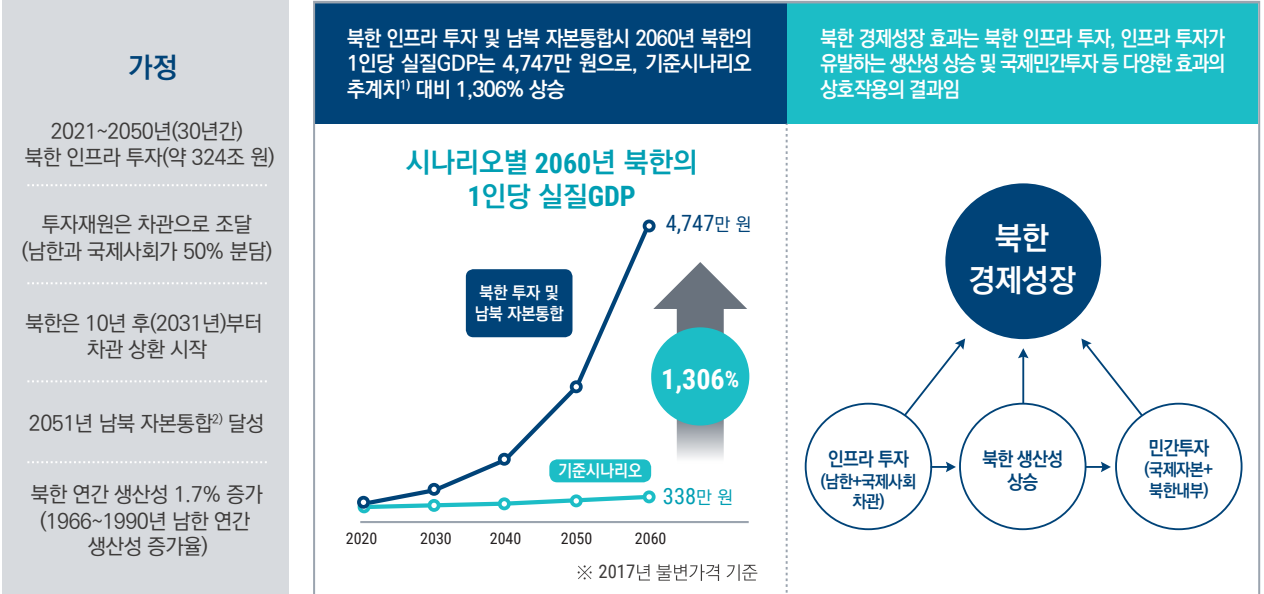
II. 북한 인프라 개발투자액 추계

- 인프라 9개 분야에 대하여 2021~2050년(30년간) 약 324조 원 투자 필요
- 주요 인프라 분야별로 필요투자량 및 단가를 추계하여 분야별 투자액 산출



Ⅲ. 북한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자본통합의 효과 분석

1. 북한 1인당 GDP 성장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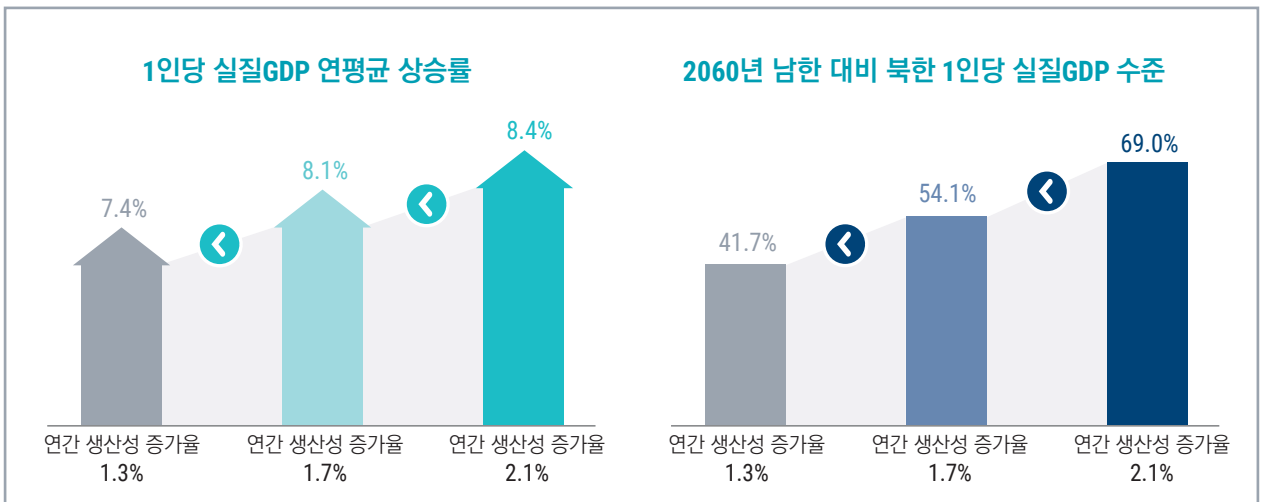
1) 기준시나리오 추계치: 북한의 현 경제체제 및 대북제재 유지로 북한 인프라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인당 GDP 등 거시경제변수 추계치

2) 남북 자본통합: 남북한 간 자본시장 통합 및 자본의 거래비용 하락

북한 인프라 투자는 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

2. 생산성 증가율 차이에 따른 북한 1인당 GDP 성장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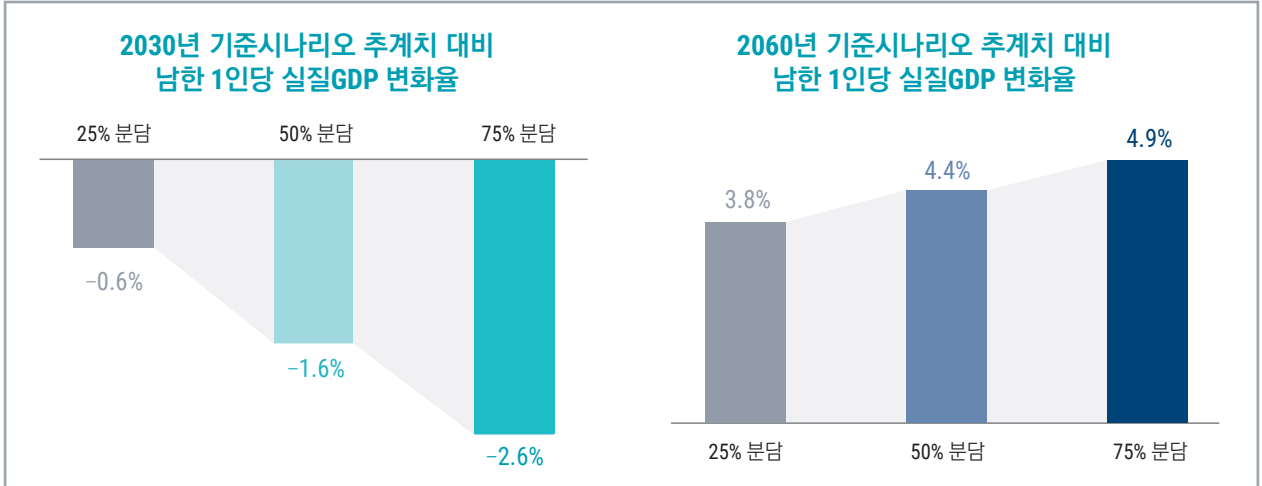
- 북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북한의 1인당 GDP 성장효과는 크게 달라짐



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내부적 제도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병행 필요

3. 남한 자원분담에 따른 남한 1인당 GDP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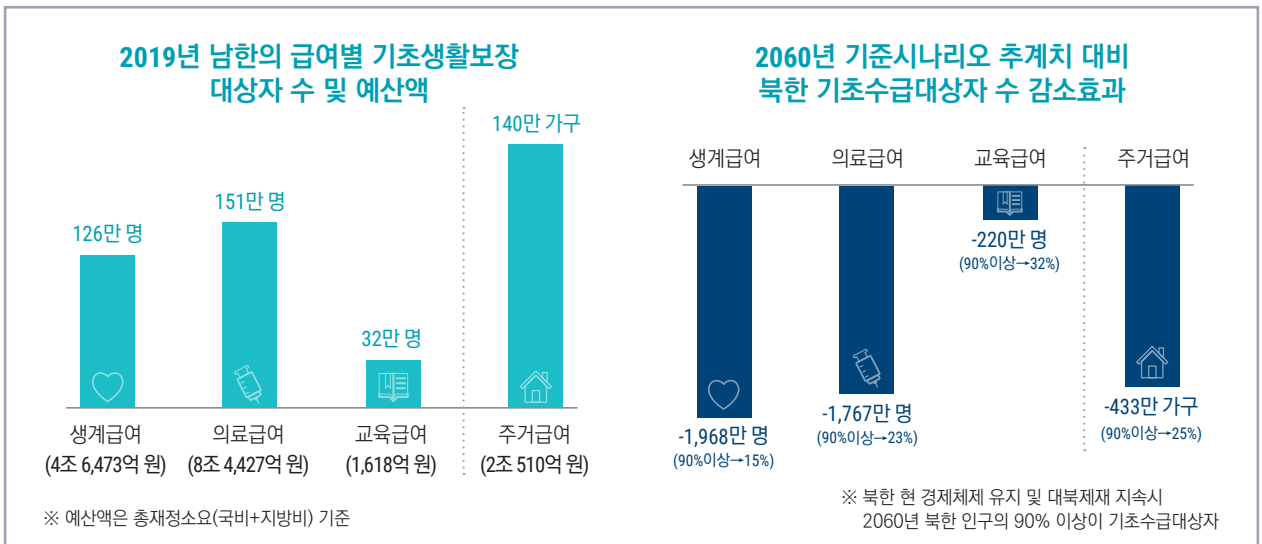
- 남한의 차관 자원분담이 클수록 차관제공 초기 남한 1인당 GDP 감소효과 및 북한의 차관상환 후 남한 1인당 GDP 증가효과가 커짐



북한 인프라 자원 분담 비율 결정시 단기적 손실과 장기적 이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
IV. 북한지역 사회보장 수급대상자 감소효과 추계: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

- 2019년 기준 남한의 급여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는 32만 명(교육급여)~151만 명(의료급여)이고, 예산액은 약 15조 원임
- 북한 인프라 개발 및 남북한 자본통합으로 남북한 소득 격차가 감소하여 2060년 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수 감소 예상



북한 인프라 개발 등에 따른 북한지역 소득수준 상승으로 사회보장 수급대상자 수 감소 예상